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속 통합 추진 중단 및 해군사관학교 진해 준치 촉구 건의안

(강길순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속 통합 추진 중단 및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촉구 건의안

(강길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
----------	----

발의연월일 : 2026. 7. 23.

발 의 의 원 : 강길순 · 강창석 · 구점득 · 김동엽 · 김수민
남재욱 · 남호준 · 박강우 · 박연정 · 박찬열
배명갑 · 심임숙 · 장병운 · 전태완 · 정은미
차중현 · 홍용채 · 황점복 의원(18명)

1. 제안 이유

- 정부가 지난 7월 16일 발표한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및 대전 자운대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은 단순히 교육기관을 이전하는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임
- 진해만은 조선시대 경상우수영이 설치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함포·안골포·웅포해전에서 승전한 역사적 장소이자 외해의 파도를 피할 수 있는 천혜의 군항임. 해군사관학교는 1946년 3군 사관학교 중 최초로 개교한 이래 80년간 1만 여 명의 정예 장교를 양성해 온 대한민국 해군의 뿌리이자 정신적 지주임
- 함정 실습, 항해, 해양 생존 훈련 등 해군 장교 양성 과정은 바다를 떠나 이루어질 수 없음. 미국 등 세계 어느 해양강국도 해군사관학교를 내륙으로 이전하지 않으며,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합동성이 발휘됨
- 해군사관학교 이전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졸속 행정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고도제한 등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진해구민에게 과거 해군작전사령부 이전에 이어 또다시 자부심과 정체성을 짓밟는 처사임

- 국가 안보는 5년 정권의 임기가 아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하므로, 졸속 통합 및 이전 계획의 전면 중단과 해군사관학교의 진해 존치를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함

2. 주요 내용

- 정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속 통합 및 대전 자운대 이전 계획의 즉각적인 전면 중단 촉구함
- 바다 없는 내륙 이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해양 방위 전문성과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한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확정 요구함
-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진해구민과 창원시민에 대해 사과하고, 해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의 철회를 촉구함

3. 건 의 문: 붙임

- 4. 수 신 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실(의전비서관),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속 통합 추진 중단 및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촉구 건의문

정부는 지난 7월 16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해군사관학교 통합과 이전은 단순히 교육기관 하나를 옮기거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와 국가 안보의 근간, 해군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군항도시 진해의 정체성과 미래가 걸린 엄중한 국가적 사안이다.

진해에 해군사관학교가 자리 잡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진해만은 섬과 반도에 둘러싸여 천혜의 군항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조선시대 경상우수영 설치부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합포·안골포·웅포해전 승전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간 조국의 바다를 지켜온 해양 방위의 최전선이었다.

해군사관학교는 1946년 1월 17일 3군 사관학교 중 가장 먼저 개교하여 지난 80년간 1만 여 명의 정예 장교를 배출하였고, 고 이인호 소령, 고 윤영하 소령과 같은 호국영웅들을 키워낸 대한민국 해군의 요람이다. 해군사관학교를 옮기는 것은 진해에 축적된 충무공의 호국정신과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 그리고 진해구민의 자부심 그 자체를 지우는 것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에 불과하다. 병력이 줄어드는 시대일수록 전문성을 갖춘 정예 장교의 육성이 더욱 절실하며, 합동성은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조차 육·해·공군사관학교를 엄격히 독립 운영하고 있다. 함정 실습, 항해 훈련, 해양 생존 훈련이 필수적인 해군 장교 교육을 바다 없는 내륙인 대전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은 해군의 전투 역량을 저해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세계 어느 해양강국도 해군사관학교를 바다 없는 내륙에 설치하거나 내륙으로 이전한 바 없다.

진해구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고도제한 등 적지 않은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조국의 바다를 지킨다는 긍지로 해군 장병과 생도들을 한 가족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단 한 차례의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과거 해군작전사령부에 이어 해군사관학교마저 이전시키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오랜 헌신을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이다.

정권은 5년이지만 국가 안보는 영원하다. 해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는 단기적 행정 편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한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100만 창원특례시민의 절박한 심정과 엄중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각 군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속 통합 및 대전 자운대 이전 계획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해양 환경에 입각한 해군 장교 교육의 특수성과 80년 역사적 정통성을 인정하여, 해군사관학교의 진해 존치를 즉각 공식 확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진해구민과 창원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7월 27일

창 원 시 의 회